

굳건하게 파업을 유지해 성과연봉제 저지하자

철도와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3주째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이 파업이 “기득권 지키기”라며 철밥통 비난 레퍼토리를 또 꺼내 들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오히려 이 비난을 퍼붓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기득권 지키기의 끝판을 보여 준다. 우병우 사건부터 미르·K스포트스 재단, 최순실의 딸 특혜 논란까지 박근혜 최측근 인사들의 비리 의혹이 연일 폭로되는 상황을 보라. 반면 정부와 여당은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국가 폭력, 세월호 진상규명 등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파업이 지속되자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에 대한 지지와 정부 비난 여론이 높아졌다. 최근 박근혜의 지지율은 29퍼센트까지 떨어졌다.

철도와 서울대병원 파업이 계속되는 데다 화물연대 파업까지 가세해 정부를 더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특히 철도와 화물연대의 파업은 정부와 사용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여파로 화물 수송이 여전히 골칫거리인 상황에서 수출입 컨테이너 수송과 시멘트 수송까지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자 투쟁에 밀려 양보하지 않으려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가뜰이나 깊어지는 경제 위기 때문에 지배계급의 수심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설상가상으로 삼성 갤럭시 노



트7 단종 결정으로 상당한 경제적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그래서 철도공사가 대체인력 수천 명을 투입하고도 3천 명가량의 계약직 신규 채용을 추진하고, 경찰은 운송 거부를 선동하는 화물연대 파업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정부가 성과연봉제 강행을 일단 중단하고 내년 3월까지 ‘사회적 논의’(국회 논의기구 마련)를 해 보자는 공공운수노조 지도부와 야3당의 ‘중재’ 요구를 단칼에 거절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요컨대 정부의 강경 대응은 정부와 사용자들의 위기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핵심 노동 개악 전선에서 밀리면, 현 정부의 노동 개악은 물 건너갈 뿐 아니라 다른 부문 노동자들도 투쟁에 나서도록 고무하는 효과를 낼 것이기 때문이다.

연대

이럴 때 정부를 더 밀어붙여야 정부가 양보 시늉이라도 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은 정부와 여당에 넘어갔다’거나 “이제 남은 건 성과연봉

제 도입을 사실상 저지하는 확인 절차 뿐”이라고 현 상황을 보는 것은 지나친 낙관이다.

이것이 파업 노동자들의 사기를 북돋으려는 의도이겠지만, 아직 진행 중인 전투를 효과적으로 벌이려면 사태를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

철도와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단단하게 파업을 지속하며 버티고 있지만, 파업이 길어질수록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함께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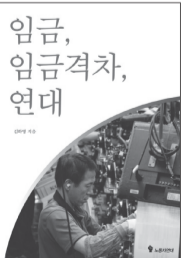
철도 노동자들 사이에 필공 파업으로 파업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약점에 더해, 대체인력 신규 채용 확대로 파업 효과를 더 무력화하는 것에 우려가 커지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최근 함께 파업을 벌인 다른 노조들이 파업을 중단한 것도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유지하며 파업을 지속해 가도록 대체인력 채용에 반대하는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청년들을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해 파업 파괴자로 사용하는 역겨운 시도에 항의하는 것은 정당하다. ‘공공성 강화 성과·퇴출제 저지 공동행동’이 대체인력 채용 규탄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은 확대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과 철도 파업이 결합된 기회를 적극 이용해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파업을 지속한다면, 정부를 물러서게 만드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노동운동 전체에서 철도, 서울대병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실질적 연대도 더 확대해야 한다.

추천 소책자



임금, 임금격차, 연대

김하영 지음
136쪽 | 4,000원
10권 이상 구입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구입 문의: 02-2271-2395
<https://workerssolidarity.org>



노동자 정치 신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연대

를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http://wspaper.org>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하라 화물노동자 파업 정당하다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를 요구하며 시작된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이 나흘째에 접어들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표준운임제 도입 약속, 노무현 대통령 후보시절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 박근혜 정부 대선 때 ‘전체 화물차 도로비 전일 할인’ 약속 지켰는가, 14년 동안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것은 정부인데 왜 우리 화물노동자가 집단이 기주의이고 비상식적인가.”

정부가 추진 중인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은 뒤늦게 때리기의 절정이다. 14년 전에 폐지를 약속한 지입제(운수 회사에 개인 소유 차량을 등록해 일감을 받는 것)는 유지하고, 특수고용 상태인 화물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화물차 수급조절은 사실상 풀겠다는 것이다. 수급조절이 풀리면 기업주들은 이를 고용 불안과 저임금 등을 강요하는 데 이용할 것이다. 결국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은 물류·유통 기업주는 밀어주고, 화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더욱 후퇴시키는 구조 개혁이다.

또, 화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후퇴는 도로 위에서 사고 위험을 더 키울 것이다. 지난 10년간 화물차 사고로 매년 평균 1천2백31명, 하루 평균 3.37명이 사망했다. 낮은 운송료 때문에 끊임없이 강요받는 과적, 장시간 운송, 야간에만 할인되는 도로비는 화물노동자를 사고의 위험으로 내몬다. 화물노동자들은 이 같은 현실을 ‘도로 위의 세월호’라고 부른다. 정부가 막을 수 있음에도 외면하고 있어 벌어지는 비극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파업은 화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고 안전을 위한 이타적인 투쟁이다. 번번히 약속을 어겨온 정부는 화물노동자를 비난할 자격이 눈곱만큼도 없다.

물류 적신호

정부는 10월 11일 운송 미참여자가 9백19명으로 줄었고, 운송거부율도



0퍼센트라며 파업 효과를 축소하려 애쓴다. 그러나 파업 대열은 경찰 추산으로도 3천3백 명이고, 운송거부율은 전체 컨테이너 차량 2만 1천757대 중 40퍼센트도 안 되는 8천377명만을 조사한 결과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평소 부산신항에서 경남 함안까지 운송료가 18만~20만 원인데, 지금은 80만~90만 원을 주고도 차를 못 구하는 지경이다.

정부는 컨테이너 장치율(항만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의 비율)이 60퍼센트 대를 유지하고 있다지만, 노조에서 파악하기로는 부산신항의 한진CY(컨테이너 보관구역)가 86퍼센트, 다른 CY도 70~73퍼센트다. 장치율이 85퍼센트가 넘으면 컨테이너의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이번 파업이 물류 봉쇄 방식과 규모 면에서 2003년이나 2008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벌써 화물노동자 50여 명을 연행하고, 부산신항에서 집회를 하는 노동자들 머리 위로 연일 경찰헬기를 띄워 위협하는 것을 보면 정부가 ‘겉으로만 태연한 척’하는 것이라는 노동자들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따라서 3일만, 5일만 지나면 파업이 끝날 것이라 믿는 정부에 버티며 싸우면, 정부가 노심초사하는 ‘물류대란’ 압박은 훨씬 커질 것이다. 정부가 부산신항의 물류 타격을 가장 신경쓰는 만큼, 파업 거점을 분산하기보다 부산신항에서 대규모로 결집해 운송 거부 선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물류 대란”을 걱정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기성체제에 도전

할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보여 준다. 화물노동자들은 강력한 힘으로 몇 차례나 정부를 상대로 싸워 이긴 경험이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물류 수송을 멈추면 전 산업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을 통해 정부와 사용자들의 통줄을 타게 만들었던 것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위기는 경제 위기, 부패추진, 레임덕으로 더 심화하고 있다. 철도,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이 굳건히 유지될수록 정부는 더 곤혹스러운 상황에 내몰릴 것이고, 더 나아가 다른 부문 노동자들의 연대와 투쟁도 고무할 수 있다. ‘물류를 멈출 수 있는 힘’은 화물, 철도 노동자들에게겐 강점이고 정부에게는 약점이다. 이 힘을 심분 발휘한다면 14년 동안 빼앗겼던 약속들을 다시 되찾아 올 수 있다.



노동자 정치 신문

<http://wspaper.org>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연대 를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도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